

최저임금 5.1% 인상에 중기·소상공인 업계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5.1%인상...9160원으로 결정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도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노동계와 공익위원

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했다”며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공연은 “코로나19의 극심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실상가상, 더욱 큰 고통을 안겨줄 수 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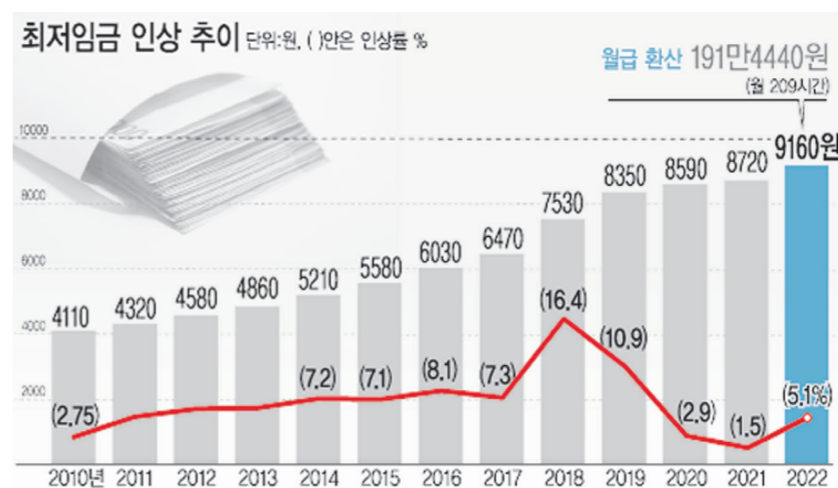
이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안정화되고 고용을 늘리고 사업 활성화에 나설 것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확대는 얻지 못하고,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상황이 어려운 때에도 매년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최저임금의 격년 결정 실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실시 ▲소상공인 지불 능력 평가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을 요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됨에 따라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고용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동취재본부

“또 헛발질”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시장 ‘부글부글’

‘재건축 2년 의무거주’ 1년만에 없던 일로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발표를 보고 선제적으로 움직였던 집주인들과 이로 인해 거주지를 옮긴 세입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운천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한 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예고한 후 1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재건축 단지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본래 취지 보다 세입자 주거 불안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정비사업 투기 자금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도입하려 했는데 오히려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쫓으면서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전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라며 “투기 자금 유입 방지의 경우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것들은 극복하기 어려우니 빼고 가자는 쪽으로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이 재건축 실거주 의무를 1년 만에 없던 일로 되돌리면서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게 됐다.

특히 정부 정책을 믿고 실거주에 나선 집주인이나 그로 인해 거주지를 옮겨야 했던 세입자들은 정부의 행태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분노한 피해자들의 원망 글이 넘쳐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오래 살았던 집주인이 갑자기 실거주 한다고 해서 지난달에 쫓겨나듯 이사를 했는데 이제와서 되돌린다고 하니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다른 누리꾼은 “실거주하려고 4000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하고 들어왔는데 1년 만에 다시 철거하러 나가야 한다”며 “무슨 정책을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정책 자체를 불신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다른 누리꾼은 “정부가 뒤늦게 진게 한 두 번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며 “만약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다시 말 바꾸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쫓겨난 세입자만 불쌍하다”며 “정부가 이사비용 물어

주고 책임져라”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시뮬레이션 없이 정책을 추진해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윤지혜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6·17 대책이 발표된 후 작년 말부터 미리 움직였던 수요가 적지 않았고 임대차3법과 맞물리면서 전세가격 상승에 많은 부담을 줬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책 피해는 시민들이 입은 것이라 정부의 정책 추진에 세밀함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전세시장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견해가 나뉜다. 재건축 단지 실거주 의무가 전세시장 불안 요인 중 하나였던 만큼 이번 철폐 결정이 전세시장 수급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이 있는 반면 이미 집주인들이 대거 입주했기 때문에 전세 시장에 도움이 되는지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 재건축 단지 의무거주 요건으로 인해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전체적인 전세시장 수급 흐름 개선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2년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낸 뒤 공실로 남겨둔 사례가 많은데 다시 세입자를 들이면서 전세 공급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반면 윤 수석연구원은 “전세불안 해소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행을 앞두고 이미 움직일 수요는 많이 움직였다”며 “공실로 비워뒀던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을 수 있지만 갱신 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이 적용되는 만큼 그 자체로 전세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진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선욱기자

시중 통화량 3385조 ‘사상 최대’...주식 대기자금 증가



시중에 풀린 돈이 사상 처음으로 3385조원을 돌파했다. 한달 새 21조 원 넘게 증가했다.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흐르는 현상은 지속됐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5월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5월 시중 통화량인 광의 통화량(M2)은 3385조원(계절조정계열·평년 기준)으로 전달(3363조6000억원)에 비해 21조4000억원(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M2는 현금·요구불예금·수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연체금

5월 시중에 풀린 돈 전년동월대비 11.0% ↑

화가 가능한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M2 증가율(원계열·평년 기준)은 전년 동월대비 11.0%다.

지난 5월 M2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기업, 기타 금융기관 등 모든 경제주체에서 고루 늘었다.

가계부분의 M2는 전월보다 6조 7000억원 늘어난 1651조4000억원이었다. 기업부분에서도 4조1000억원이 증가했으며, 기타금융기관은 15조 7000억원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보통 통화량은 증가폭이 최대인지만 아닌 지를 보는데, 4월에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사상 최대 폭으로 늘었다”며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5월 시중 통화량의 월간 증가폭이 적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주체별로 보면 기타 금융기관이 시중통화량 증가세를 이끌었다”며 “지난 5월에 4월처럼 공모주 청약과 같은 큰 규모의 이벤트가 없었으나 증가세가 유지된 것은 주식거래 관련 자금 수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인이 증권사 쪽에 예치금을 많이 넣었다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단기자금 지표인 M1(협의통화)은 1265조4000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원(0.6%) 늘었다. 금융기관 유동성(Lf, 평잔)은 4677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전년 같은 달보다는 9.2% 증가했다. 광의 유동성(L, 말잔)은 5923조2000억원으로 전월과 비교하면 0.5% 감소했다.

전년 동월 말 대비해 8.8% 늘었다. 이슬비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집콕족 위한 간편식 인기

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간편식을 진열하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집콕’하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간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간편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 13

광주은행, 1000억원 규모

ESG 지속가능채권 발행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사용

광주은행은 12일 ESG 인증 최고등급을 받은 1000억원 규모의 원화 ESG 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사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한다.

ESG채권은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개선 등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나뉜다.

광주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지속가능채권’으로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의 혼합 형태 성격이다.인중 적격기관인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최고등급인 ‘ST1’ 등급을 받아 채권의 투명성과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였다.

광주은행은 이를 위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내부 ESG채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한국기업평가로부터 검증보고서를 취득했다.

이에 앞서 광주은행은 ESG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한 포용금융과 생산적 금융에 주력하기 위해 지난 4월 ESG팀과 전문 협의체인 ESG 추진위원회를 신설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앞으로 탈석탄 정책 추진과 친환경 금융 관련 투자 확대 등으로 지역사회와 경제는 포용금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ESG 경영에 따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유나기자

인터파크 매물 나왔다

1세대 e커머스 시대 저물어



한국 1세대 전자상거래(e커머스) 대표 주자인 인터파크가 인수 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이베이코리아가 최근 신세계그룹이 마트에 인수된 데 이어 토종 이커머스 기업들이 잇따라 새 주인 찾기에 나서면서 1세대 e커머스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의 창업주이자 최대주인인 이기형 대표는 NH투자증권을 매각자문사로 정하고,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이사와 그의 특수관계자는 인터파크 지분 28.4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지분 가치는 전달 종가(5650원)를 기준으로 1284억원 규모다.

인터파크는 “NH투자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데이콤의 사내배치 육성프로그램인 ‘소(小) 사장제’에서 출발한 인터파크는 1996년 6월 국내 최초의 인터넷 쇼핑 서비스를 개시했다. 1997년 데이콤의 자회사 ‘데이콤 인터파크’라는 이름으로 분리·독립했고, 1999년 7월 인터파크로 사명을 변경한 것과 동시에 코스닥에 상장했다.

뉴시스

크라운제과, 여름 새콤달콤 완판

한 달 만에 100만개



크라운제과는 지난달 출시한 새콤

달콤 여름 시즌에디션 ‘수박맛’이 한 달 만에 완판됐다고 13일 밝혔다. 3개월 판매 물량으로 준비했던 100만개가 판매됐다.

매출은 5억원으로 3초당 1개씩 판매된 셈으로 계산된다.

새콤달콤 수박맛은 신맛이 강한 새콤달콤에 달달한 수박의 청량감을 제대로 담은 제품이다.

크라운제과는 8월까지 200만개를 추가 생산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